

## 달라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울고 웃는 노인들

글\_김동섭(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정부가 매월 8만4000원씩 주니까 정말 고맙네요. 담뱃값 밖에 안되는 돈이지만 정부가 노인들에게 신경을 써준다는 것이 고마울 뿐이지요.”

지난 1월31일 통장에 기초노령연금으로 8만4000원이 입금된 강원도 화천에 사는 이모(71)씨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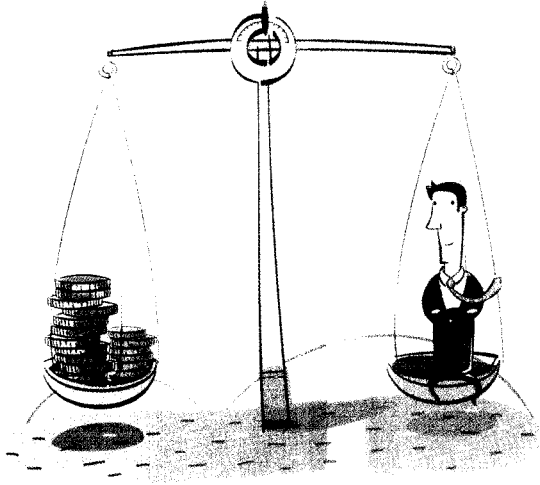
올해부터 이 씨처럼 70세 이상이 된 노인 60%(179만명)는 지난 1월부터 매월 8만4000원씩 받고 있다. 부부가 모두 70세를 넘었다면 두 명 분을 합쳐 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원래 16만8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부에게 돈을 줄 경우엔 약간씩 줄여준다.

이처럼 노인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은 올해와 내년에 연이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수령자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아지고, 내년부터는 수령자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작년에 국회에서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실상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받는 돈이 줄었다고 울상짓는 이들도 많다. 왜냐하면 정부가 작년까지 노인들에게 주던 경로연금을 대신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중복 혜택을 없앤다며 교통수당과 장수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탓이다.

경남 진주에 사는 이모씨(91)는 이달 통장을 보고 놀랐다. 자택이 있고 저축도 있어 소득이 월 40만원 이상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 올부터 받는 돈이 교각 1만원(교통수당)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받았던 경로연금(3만5000원)과 장수수당(5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1만원이라도 받던 교통수당마저 아예 사라진다.

이처럼 올해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교통수당은 그래도 계속 받았지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수당 지급이 아예 없어진다. 장수수당은 일부 시·군·구는 계속 주겠다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내년



부터 폐지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수당은 모두 없애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매월 생계비를 받던 저소득층 노인들도 울상짓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계산하면서 기초노령연금에서 받는 돈을 빼고 지급, 받는 돈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노인들을 울상짓게 만든 이유를 정부는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린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도 1조6000억원이 드는 등 매년 돈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예산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 예산을 살펴 보면 그 이유를 금세 알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에 지원해주는 돈이 무려 1조2000억원이고, 군인연금 적자 지원액까지 합치면 2조원이 넘는다. 이 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넘기면 노인들의 혜택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오히려 지금보다 액수를 배이상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돈(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처럼 공무원연금의 내는 돈을 올리든지, 받는 돈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예산을 쥐고 흔드는 것이 공무원들이어서, 아무도 자신들에게 손해가 가는 그런 연금제도 개혁을 할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같은 그런 개혁을 할 공무원은 어디 있을까? †